

#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3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7. 5. 9.

발 의 자 : 김태훈 의원외 8인

## 1. 제정이유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5조에서 정한 노령·신체적 장애·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저소득 주민 중에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에게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급내용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시장의 예산확보 내용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바. 국민건강보험료 조사실시, 지원중단, 환수조치, 비용부담 내용을 규정함(안 제6조, 내지 제9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조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2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1조, 제4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3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1조
- 나. 합 의 : 복지정책과와 합의되었음.

##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노령·신체적 장애·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(이하“법”이라고 한다)상의 수급자가 아닌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인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**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이며,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,000원 미만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(이하“대상자”라 한다)로 한다

1.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
2. 세대주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세대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6호, 제10호, 제12호,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세대
4. 모·부자가정세대
5. 조손세대
6. 소년·소녀가장세대

**제3조(지원내용)** ①대전광역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료 10,000원 미만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준, 지원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4조(지원신청 및 지원방법)** 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2조제1항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는 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기일 내 지원한다.

**제5조(예산확보)**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.

**제6조(조사실시)** ①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대상자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, 자산상황,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7조(지원중단)**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
2.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

**제8조(환수조치)** ①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

**제9조(비용부담)** 이 조례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비용은 대전광역시 100분의 70을 해당 자치구는 100분의 30을 부담한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관 련 법 령

## 【국민기초생활보장법】 제5조, 제22조, 제24조

### 제2조 (정의)

11. "차상위계층"이라 함은 수급권자(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

제5조 (수급권자의 범위)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.

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 (신청에 의한 조사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.

1.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
2.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에 관한 사항
3. 수급권자의 근로능력·취업상태·자활욕구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
4.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·가구특성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 및 건강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

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조사를 관계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기타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보장기관이 제1항 각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의료보험·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등 관련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⑥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⑦보장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 다만,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화일로 대체할 수 있다.

⑧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4조 (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5.12.23>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.

③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, 조사의 위촉, 관련전산망의 이용등 기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

## 【사회복지사업법】 제4조

第4條 (福祉增進의 責任)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03.7.30>

## 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】 제4조, 제41조

제4조 (적용대상 국가유공자)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등(다른 法律에서 이 法에 規定된 禮遇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를 포함한다)은 이 法에 의 한 禮遇를 받는다

6. 公傷軍警 :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敎育訓練 또는 職務遂行중 傷痕(公務 상의 疾病을 포함한다)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者로서 그 傷痕程度가 국가보훈 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痕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礙를 입은 것으로 判定된 者

10. 4·19革命負傷者 : 1960年 4月 19日을 전후한 革命에 참가하여 傷痕를 입은 者로서 그 傷痕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痕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礙를 입은 것으로 判定된 者

12. 公상공무원 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規定된 공무원(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)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(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規定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判定된 자

14. 國家社會發展特別功勞傷痕者(이하 "特別功勞傷痕者"라 한다) : 國家社會發展에 현저한 功이 있는 者중 그 功勞와 관련되어 傷痕를 입은 者로서 그 傷痕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痕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礙를 입은 것으로 判定되어 國務會議에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議決된 者

제41조 (의료보호의 실시)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. <개정 2005.7.29>

## 【장애인복지법】 第33條

第33條 (醫療費의 지급) ①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障碍人에 대하여 障碍程度, 경제적 부담능력등을 고려하여 障碍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  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·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.

## 【노인복지법】 第1條, 第4條

第1條 (目的) 이 法은 老人의 疾患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疾患狀態에 따른 적절한 治療·療養으로 心身의 건강을 유지하고, 老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老人의 保健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4條 (保健福祉增進의 責任)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保健 및 福祉增進의 責任이 있으며, 이를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  
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강구함에 있어 第2條에 規定된 基本理念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 
③老人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者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老人의 保健福祉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

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찬 성 의 원 서 명

[illegible]

